

당정, 추석 연휴 8000개 동네 병·의원 지원한다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협의회 응급실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 25일까지 비상응급 주간 운영 당직 기관 지정...보험 수가 지원

당정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의료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8000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약 400명도 새로 뽑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점 논의했다.

당정은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 여는 의료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도 이뤄진다.

응급의료센터가 필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를 더해 400명 가량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예산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연휴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 의료계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지원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단 지급 확대 이외에 처우 개선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 개선도 살펴보기로 했다.

당정은 앞서 발표한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투자 방안에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의학교육에 투자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기반한 의대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의대 건물 리모델링도 내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필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에 기반해 학생들이 지역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속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함께 의료단체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 개선 등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단체가 준비돼있다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의료단체가 몇 곳이고, 추석 전 출범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단체가 있고,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과 함께 쉼이밀 상표권 침해 사건 등 대기업 갑질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대기업 상표권 침해로 중기 존폐 위기”

국회서 일동후디스 규탄 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일동후디스(이하 후디스)가 상표권 침해로 광주지역 중소기업 쉼이밀을 존폐 위기로까지 몰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부터 시작된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는 전형적인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갑질과 기술탈취 사건의 하나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환경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시장을 개척해나갔던 중소기업들이 관

련 업계인 대기업의 횡포에 휘말려 결국 사업 부도와 시장 퇴출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며 “거대한 자본의 힘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시도와 소송 등이 작은 기업에 얼마나 큰 압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허 및 상표권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상표나 특허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이 있지만 기술탈취, 소송갑질 등도 구체화된 행태로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가 19일 오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열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광주평화회의와 기념식을 개최한다.

‘9·19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이종석·김연철·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장관, 임동훈·서훈 전 국정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와 새로운 평화구상’을 주제로 한 첫번째 토론회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주재로 최중건 전 외교부 차

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 최광철 민주민주참여포럼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토론회는 ‘두 개 국가론과 새로운 통일구상’을 주제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주재로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 이동기 강원대 교수가 주제발표 한다. 이어 기광서 조선대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승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오후 6시에는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박능후 포럼 사회재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희중 전 대주교의 환영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김동연 경기지사의 평화메시지 발표가 이어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참석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추석맞이 따뜻한 사랑의 장보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주도심공사 등 사회협력기관 직원들이 12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따뜻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에서 광주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견어물 등을 구입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도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구축사업 탄력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 1조4000억 원 대규모 투자 실현

전남도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이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선정돼 1조 4000억 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이 정부 핵심시책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돼 2872억원 규모의 정부 펀드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은 민간이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큰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 지원해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2023년부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신청을 준비한 전남도의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은 정부와 민간 금융시장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은 거쳤으며, 민간 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지난 6월 정부가 야심차게 지정·발표한 ‘기회발전특구’의 전국 최초 투자 실현 사례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은 여수 간척지에 총 1조4362억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본격 운영, 오는 2047년까지 20년간 여수·광양 만권에 연 300만 톤 규모의 산업용·발전

용 LNG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당초 순수 민자사업으로서 2020년 SPC를 설립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다만 최근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은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 생산유발효과 2조800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또한 취업등록세 312억 원을 확보하고, 여수시는 소득세·재산세 등 매년 27억 원씩 20년간 안정적 세입 확보가 가능해진다.

묘도터미널의 LNG 공급가격은 기존 LNG보다 10% 이상 저렴해 여수광양만 권기업의 에너지 원가 절감 및 산단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 기자

윤 대통령, 19~22일 체코 순방... ‘원전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 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공화국을 방문, 체코 대통령과 총리와 회담을 연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폭넓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체코 순방 일정을 설명했다.

한-체코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의 회

담에서도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의-체코상의 및 체코 산업연맹이 공동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대표적 원전 설비 생산기업을 방문해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김선욱 기자